

社會政策의 概念에 對한

基督教的 解釋試考

A Study on an Interpretation of the Christianity
toward the Concept of Social Policy

金 德 俊

(文學博士, 前 江南社會福祉學校學長)

目 次

- I. 序 論
- II. 社會政策의 意味
- III. 社會政策概念의 推移
- IV. 基督教的 解釋
- V. 結 論

I. 序 論

196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의 사회사업교육은 Micro-approach의

전성시대라고 생각하시지만 마도 이 시점일 경우에서 Brandeis 대학에 Florence Heller 사회복지대학원이 생겨서 Macro-approach의 교육을 중점으로 하기 시작하여 당시 Micro-approach의 미국 사회사업교육계에서 냉소와 비판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그 대학원 출신들이 Social policy and planning의 강의를 어느 대학에서나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다는 말을 듣고 있지만 1971년 9월 ICSW의 실행이사회(부랴셀, 벨) 참석 후 그 당시 Brandeis 대학 총장이며 ICSW의 국제회장이었던 Charles I. Schottland 박사*의 초청을 받아 필자가 그 대학원을 방문했을 때 학생수가 132명이었는데 그 중 6명만이 석사학위과정 이수자이고 나머지 126명은 모두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사회정책에 관한 한 그 출신들이 주로 교수의 책임을 지고 있음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해 11월 초에 인도의 봄베이에서 열린 바 있는 동남아 사회사업교육자 세미나에 UNICEF의 초청으로 참석한 바 있는데 사회개발과 인구문제가 주의제였으며 따라서 사회정책으로서의 인구문제 즉 가족계획과 사회사업교육을 직결시켜 가족계획에 있어서의 사회사업교육의 역할이 무엇이냐가 제기된 첫번째 세미나였다. 필자는 귀국 후 사회사업교육에 있어서의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The Chung-Ang Herald¹⁾에 기고한 바 있지만 어떻게 우리나라 사회사업교육에 사회정책의 중요성인식이 심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70년대 초반인 고로 아직도 나이가 어리다 하겠다. 즉 봄베이세미나의 echo 세미나가 수원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열린 것이 다음해인

* 연방정부사회보장행정처장도 역임

1) April 10, 1972, p.2

* 중앙대학교 영자신문임

1972년 4월이니 그럴만도 하다. 우리나라의 사회사업교육은 Micro - approach 면에서 크게 발전하였다고 본다. 또 계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여건도 그렇지만 Macro - approach 에 적극적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보며 또 그 핵심이 사회정책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정책과 사회사업에 관한 문헌은 드물다. 이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사회정책의 사상적 고찰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시도하여 보려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사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회정책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Ⅱ . 社会政策의 意味

사회라는 말을 先頭語로 한 사회사업, 사회문제, 사회운동, 사회봉사사업 등의 용어는 누가 어느 때에 사용하기 시작했느냐에 대해서는 모를 일이나 그러나 그것은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제도가 출현하게 된 산업혁명 이후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정책의 동의어가 사회개량이라고 한다. 사회개량(주의)이란 말보다 사회정책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화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다면 사회라는 말과 정책이라는 말의 의미는 개량이라는 말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선두어로서의 「사회」라는 말이 19세기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에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Ponsioen은 「19세기의 "Social"이란 말은 아주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어휘들이 그렇듯이 사회사업, 사회복지사업, 사회활동법 등을 더욱 감상적이며 그러므로 대체로 모호하다」고 하고 「그러나 그

후로 이 의미는 빈곤과 고통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회를 개혁하는데 관련된 모든 방면으로 달라졌다. "고통스러운(Miserable)"이란 말은 처음엔 경제적인 의미에서 해석되다가 그 후론 심리적인 의미(개인들에게 나타나는 원인들)로, 또 그 후로는 사회적인 의미(상호관계, 집단의 정신상태, 사회구조에서 나타나는 원인)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동시에 고통스런 사람들이란 개념이 경제적, 사회적 또는 심리적 견지에서 볼 때 약한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졌다. 이 의미의 "Social(사회)"라는 말이 근본적으로 역사적인 고로(분석학적인 첫번째 의미*와는 반대로) 복잡한 서양사에서만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시초에 그 의미가 감상적이고 덕행적이었던 고로 "Social"이라는 의미가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²⁾라고 말하고 사회란 의미속에서 그 역사적인 변화를 시인하면서 경제적 심리적 및 사회적 고통의 개량을 암시하고 있다.

Titmuss는 정책이란 말을 「주어진 목표를 지향하는 행동을 지배하는 제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목표에 관한 행동과 동시에 수단에 관한 행동도 내포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변화를 의미한다. 즉 제상황, 제제도, 제실행, 제행위의 변화이다」³⁾라고 말하였고 Ponsioen은 정책과 정치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사회학적인 분석이다. Ponsioen, pp.17-18을 참고

註 2) Ponsioen, J.A., Social Welfare Policy, 'S-Gravenhage, Mouton Co, 1962, p.18

3) Titmuss, Robert M., Social Policy,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4, p.23

「정책이란 말은 정치라는 말과 매우 혼동되곤 한다. 정책이란 계속적이고도 계획적인 활동으로, 상황, 가능성, 저항성, 자극력과 그 반대 힘에 따라 점차로 실현되는 원거리적 목적이나 이념에 목적을 둔다. 정책은 기관, 사실 혹은 공공권력기관은 물론 개인에 의해서도 실행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정치란 기술이며 그것을 통하여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다른 목표에 목적을 둔 다른 정치가들의 반대나 사람들의 저항을 극복하는 데 목적을 둔 기술이라 하겠다」⁴⁾고 하고 정책과 정치를 구분한다.

그러므로 Titmuss의 정책의 규정이나 Ponsioen의 그것이나 공통한 점은 점진적으로 개량한다는 의미이다. 역사적으로 이미 사용해오던 사회개량이란 말을 사회정책이란 말로 옮겨 쓸 수 있는 일은 그 의미를 보더라도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사회정책」이거나 혹은 그것을 대신하여 쓰고 있는 말의 주류는 곧 사회개량주의 사상이라 하겠다.

Webster's Third International Dictionary에서 「reform」이란 단어를 찾으면 (1) restore former good, (2) bring from bad to good, (3) to amend or improve by change form, (4) change from worse to better라는 몇가지 의미가 나오나 모두가 개선·개량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Titmuss가 말한 것처럼 개량이란 말은 변화를 뜻한다. 그러나 들연변화, 급진적변화, 와전변화, 또는 근본적변화를 뜻하는 revolution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회혁명이 아닌 사회개량주의 사상의 원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註 4) Ponsioen, op.cit., p.18

olitik의 역어이다. 독일에서 Sozialpolitik란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1873년 Verein für Sozialpolitik (사회정책학회)가 창립된 이후, 독일에서 일반화된 말이다. 이 말이 일반화하기 이전까지는 Sozialreform (사회개혁)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였다. 사회정책학회가 창설된 이후에도 사람에 따라 Sozialreform이란 말을 쓰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1901년 1월 베를린에 창설된 Gesellschaft für Soziale Reform (사회개혁협회)가 「그것이다」⁵⁾라고 말하고 사회정책학회 창립 이전에는 사회개혁이란 용어를 써 왔었고 그 이후에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의 河野 (Kono)도 그의 저서에서

「하기는 <社会政策>을 社会改良主義라는 特定の 社会思想의 意味로 쓰는 것은 독일 社会政策学界뿐만 아니라 各国의 学界·思想界의 오랜 伝統이며 또한 實際로 有力한 常識으로 되어 있다. 독일 社会政策学会의 趣意書 (一八七三年五月三一日)에서도 그러하지만 또한 社会政策学会 (Der Verein für Sozialpolitik)의 設立大会 (一八七三年十一月一三日)에서 Gustav Schmoller는 開會辭에서 「社会政策」과 社会改良主義思想이라는 特定の 社会思想과를 固着케하여 다음과 같은 意味의 것을 말하고 있다. 즉 그는 社会의 平和나 勞資間의 鬭爭이 社会革命의 危險을 가져오며 사람들은 이미 自由主義의 敎說을 믿지않고 社会革命思想이 降盛하고 있음을 警告하며 나아가 그는 倫理的 社会進化思想에 基礎하여 自由放任主義와 社会主義와의 두 개의 方面에 戰線을 펴서 國家의 干涉에 의한 階級間 党派間의 和解·妥協·平和的 改良이 必要하며 또한 可能하다는 것을 強調하여 「社会政策」과 社会改良主義思想과를 結合시켜 社

註5) 辺時敏, 社会政策·社会開発, 서울, 博英社, 1978, p.13

社会政策学会의 会合의 目的은 社会關係를 改良하기 위한 基礎를 찾아내어 社会改良의 諸意見에 一般的 規定을 주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Schmoller의 見解는 단지 그의 個人的 見解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當時의 독일 社会政策学会의 意向을 代表하는 것이며 또한 독일에 있어서의 支配的인 思考였다. 같은 사실은 독일 以外的 各國에 있어서도 말할 수 있으며 「社会政策」을 社会改良主義라는 特定の 思想과만 結合케 하는 것은 現代에 있어서도 除去하기 힘든 常識이다」⁶⁾라고 하여 社会개량주의는 社会정책과 동의어 내지는 양자의 결합을 뜻하는 Schmoller의 主張을 들고 있다.

旧日本社会政策学会趣意書(明治三三年, 1907年)에 있어서도 「……우리는 放任主義에 反對한다. 그 理由는 極端的인 利己心の 發動과 制限없는 自由競争과는 貧富의 懸隔을 甚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社会主義에 反對한다. 그 理由는 現在의 經濟組織을 破壞하고 資本家の 絶滅을 피함은 國運의 進歩에 害롭기 때문이다. 우리의 主義로 하는 바는 現在의 私有的 經濟組織을 維持하고 그 範圍内에서 個人의 活動과 國家의 權力에 의해서 階級の 軋轢을 予防하고 社会의 調和를 期함에 있다……」⁷⁾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旧日本社会政策学会의 見解가 Schmoller 및 독일 社会政策学会의 그것과 꼭 같으며 諸國의 傳統的인 思考와 다른 바 없다는 것은 더 이상 說明할 필요는 없다. 日本에 있어서도 「社会政策」의 말은 곧 社会改良主義 思想을 表現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常識으로 되어 왔다.

註 6) 河野稔, 社会政策^① 歴史的理論, 京都, 法律文化社, 1971, pp.5-6

7) 河野, Ibid., pp.6-7

하면서

「독일에서는 Sozialpolitik란 말을 Soziale Reform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고 Sozialreform에 가까운 영어와 붙어는 Social reform과 Politique reform이다. 그러나 영·불에서는 Social reform(사회개혁)이란 말보다는 Social Problem(s)(사회문제), Labour Problems(노동문제)란 말로 취급되는 문제가 독일의 사회정책에 내용적으로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labour policy(노동정책), social control(사회통제), social ethics(사회윤리), social technique(사회기술), applied sociology(응용사회학), economics of labour(노동경제학) 등의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 이와같이 용어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내용적인 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공통된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라고 하면서

「영미계에서 독일어의 Sozialpolitik에 해당하는 social policy 또는 social politics란 말을 쓰는 사람은 적다.」⁹⁾고 말한다.

그러면 사회개혁주의란 말을 처음 정의한 사람은 누구인가 1930年 일본 사회과학대사전은 Lujo Brentano를 들고 있다.

Lujo Brentano는 그의 명저 Die Gewerbliche Arbeiterfrage(공업노동자문제)에서 사회개혁주의를 「현대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상 즉 사회개혁주의」¹⁰⁾라고 정의하고 있다.

註 8) 辺, op.cit., pp.13-14

河野, Ibid., p.3. 참고

9) 辺, Ibid.,

10) Lujo Brentano, Die Gewerbliche Arbeiterfrage, 1882, 禁戸辰男訳, 工業労働者問題, p.5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그 내적모순은 차차 명백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많은 改革案이 제창되었으나 이것을 대별하면 資本主義를 긍정함을 전제로한 改革思想과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즉 사유재산제도의 根本的 變革을 전제로 하는 改革案으로 대별할 수 있다.

사회개량주의는 물론 전자에 속하는 사조로서 그것이 일개의 사색적 체계로서 形態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말한 Brentano의 저서인 공업노동자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인류발전의 궁극적 목적은……萬人最高의 完成 (höchste Vollendung Aller)」에 있으며 이 목적에 도달하는 제일의 길은 문화가 內包的으로 진보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문화의 내포적진보는 사회내부에 있어서의 생존조건인 불명등을 전제로 하며 그 중에서도 모든 진보의 주요조건인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에 기대하는 바가 가장 많다.」¹¹⁾ 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부정하는 사회주의는 철저히 외면한다.

1928년 파리에서 벨쥘의 의사 루네·쌍박사의 주창 밑에 개최된 제 1회 국제사회복지회의는 「사회 썬어비스」의 과제로서 (1) 貧困에서 생기는 고난(suffering)의 완화, (2) 사회적 해악(social evil)의 予防, (3) 사회적 狀態의 改善과 生活標準의 向上이라는 3개의 원조를 들었다.¹²⁾ 이 회의의 3개의 표어도 역시 社会改良主義思想의 기반위에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920년대의 사회복지에 대한 서구 제국을 비롯한 회원 제국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註 11) 森戸訳, Ibid., pp.4-5

12) 嶋田啓一郎編, 社会福祉の思想と理論,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1980, p.1

하겠다.

Ⅲ. 社会政策概念의 推移

Brentano가 사회개량주의를 정의한 이후 社会改良主義를 바탕으로 한 정의가 東·西의 學者들에 의해서 發表되었으며 다음에 代表的인 몇가지를 들어보기로 한다.

Hirata (平田)와 Sakuchi (佐口)는 공동편저에서 「社会政策을 가지고 階級の 알력을 막아 자본제 사회의 조화를 기도(企圖)하는 것으로 하는 계급협조적(階級協調的)인 사상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견해이다. 이와같은 사고는 도의적 사회정책론, 추상적 사회정책론 및 직분협동체적 사회정책론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다」¹³⁾ 라고 말하고 도의적 사회정책론의 모델을 Schmoller의 것에서 들고 있다. 즉 「도의적 사회정책론은 가장 고전적 사회개량주의이론(理論)으로 그 대표자 G.V.Schmoller (1838~1917)는 자본주의질서의 틀 안에서 노자간(勞資間)에 분배의 공정화를 점차 실현하는 일이 사회개량으로서의 사회정책의 이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사회정책의 목적은 「부자와 빈자와의 사이의 일종의 均衡을 만들어 내는」 일이며 노자의 階級對立을 분배정책에 의해서 교정하여 보려고 하는 데 있었다」¹⁴⁾ 고 하고 도의의 기반을 분배의 공정화에 두고 있다. 같은 기반에서 있는 사람은 Wagner이다.

註 13) 平田富太郎, 佐口卓 編, 社会政策講義, 東京, 青林書院, 1973, p.3

14) 平田, 佐口, Ibid., pp.4-5

平田富太郎外, 社会政策, 東京, 世界書院, 1970 (昭和 45年), pp.19-20 참고

과정의 영역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폐해(弊害)를 입법 및 행정수단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국가의 정책」이라고 규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정책이 배제하려는 폐해는 주로 재산소득과 노동소득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분배의 불공정에서 생기는 폐해이며 이와같은 폐해를 발생케 한 것은 사유재산제도 자유경쟁 및 계약자유 원칙 등을 기초로 하는 자본제 경제질서이다. 사회정책은 이와같은 폐해를 배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사회정책요구의 주관적 동기는 재산소득과 노동소득과의 대립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노자의 계급협조를 기도하려는 데 있다」¹⁵⁾ 고 생각하였다. 공정화를 기본으로 하는데 있어서 그는 Schmoller와 같은 입장이다.

추상적 사회정책론이란 Max Weber (1868~1958)의 인식방법에 따라 이르는 바 과학적 사회정책론을 제창하는 이론이나 그 대표자 Zwiedineck-Südenhorst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사회정책적 행동을 필요케 한 해악을 배제하려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해악의 근원을 찾아 거기에 구제의 손길을 뻗히려는 사회정책만이 사회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과학적 성질은 사회과학적으로 把握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인과관계의 관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¹⁶⁾ 라고 말한다. 즉 그는 사회경제적인 인간관계

註 15) 平田, 佐口, Ibid., p.5

Adolph Wagner; Ueber Sozial-Finanz-und Steuerpolitik, Archiv für Soziale Gesetzgebung und Statistik, 1890, S. pp.4-8

16) 平田, 佐口, Ibid., p.6

平田外, p.20, 참고

Otto von Zwiedineck-Südenhorst, Sozialpolitik, 1911, S.38

의 과학적 관찰이 사회정책 행동화의 실마리라고 생각하며 그의 사회정책을 과학적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Borghht는 계급존재는 사회진보의 요인이라고 전제하고 「사회정책이라는 것은 사회의 하층계급 특히 피고용노동자의 불행을 구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시설이다」* 라고 하여 노동계급을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Brentano나 Schmoller나 Wagner 및 Zwiedineck-Südenhorst 등과 동일하다.

Wiese는 「사회정책에 있어서 윤리적 요소이며 따라서 제사회의 권력으로의 노력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책기초라는 사회적 정의가 무엇인가는 경제적필연이 결정한다. 환언하면 사회정책은 경제적필연의 노선을 따라서 시행된다」¹⁷⁾고 하고 윤리적 요인을 들어 사회적 정의를 국가의 정책기초로 하고 있다.

Heyde는 「사회정책이라는 것은 계급 및 신분 상호간 및 국가에 대한 관계를 가치관념 특히 정의의 표준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적 노력과 수단의 총체이다」¹⁸⁾이라고 하여 근본가치관념으로 정의를 주장하고 있음은 Wiese와 비슷하다 하겠다.

Ponsioen은

「그러므로 사회정책이란 사회의 개인들이나 집단의 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의 지속적인 改革에 목적을 둔 정책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 Van der Borghht, Grundzüge der Sozialpolitik, 1904, Aufl., 2. Aufl., 1923, S.45, S.568.

註 17) Von Wiese, Einführung in die Sozial politik, 1 Aufl., 1920, 2te Aufl., 1921. Leopold 백창석, 社会政策, 서울, 博英社, 1977, p.22, footnote.

18) Ludwig Heyde, Aufriss der Sozialpolitik, 1956, S.15 白, Ibid., footnote.

있겠다. 그 진보적인 실현과정에서 사회정책은 약자를 도우며 악점을 예방하고 양호한 환경을 조성 또는 개선한다.]¹⁹⁾라고 말하고 구제와 예방과 환경조성을 주장한다. 사회정책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더 넓어졌다 하겠다.

이상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정의에서 공통한 특색을 들어 본다면 (1) 자본제 경제체제의 유지, (2) 노동문제 즉 사회문제의 시인,²⁰⁾ (3) 계급협조로 개선, 및 (4) 국가가 주체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Brentano 이후 사회개량주의사상이 연면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제도가 자리를 잡은 이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노동문제는 경제문제로 그것이 곧 사회문제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문제 즉 빈곤문제는 질병문제와 범죄문제를 수반하여 온 것으로 따라서 사회문제의 범위도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객체도 그만큼 확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Ponsioen 은 인간이 당면하는 문제와 요구를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빈곤·요구·고통 또는 상실은 생물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 기아·질병·추위요, 심리학적인 면에선 ; 정신질환·어린이의 죽음,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 ; 무지·무식, 사회적인 면에선 ; 박탈·갈등·긴장·오해·외로움·빈곤, 정신적인 면에서는 ; 착취·도덕성에 대한 무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

註 19) Ponsioen, op.cit., p.18

20) 사회문제에 대한 詳論은 金德俊, “社会問題의 概念的考察” 韓國社会福祉. 韓國社会福祉研究所, 1976.11. 을 참고

겠다. 물론 어느 문화에서나 이러한 다른 여러 양상을 같은 방법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매 경우마다 긴박성에 따른 욕구들의 순위가 똑같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든 자연히 생물학적인 요구에 가장 민감할 것이나,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표준과 자기의 무의식적인 감정을 비교한 후에는 자기의 판단을 바꾸고 다른 욕구에 수위를 줄지도 모른다²¹⁾고 하였다.

인간의 요구와 문제의 넓이와 깊이를 잘 파헤친 분석이다. Brentano에서 시작하여 Ponsioen에 이르는 동안 사회정책의 사상적 기반인 사회개량주의사상은 변치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객체는 점차 확대되고 따라서 그 대응책도 확대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R.M.Titmus가 설정한 3개의 모델이 나온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Titmus는

「제한적이건 광의적이건 간에 이들 정의나 유사정의들은 가치판단을 포함한 3개의 목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첫째로는 그것은 시혜(施惠)를 목표로 한다 - 시민을 위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책, 둘째로는 그것들은 경제적 목적과 동시에 비경제적 목적을 포함한다. 예를들면 최저임금, 소득유지의 최저기준 등등이다. 셋째로 그것들은 부자로부터 빈자에게로 자원명령양도(Command-Over-Resources)에 의한 진보적 재분배를 하는 어떤 수단을 포함한다²²⁾」라고 하면서

註 21) Ponsioen, op.cit., p.21

22) Titmuss, op.cit., p.29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3개의 대조적인 사회 정책의 모델 혹은 기능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모델만들기의 목적은 만들기 (building)의 구조를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경제적 및 사회생활의 어떤 영역에 관계있는 온갖 무질서와 혼란, 제제도와 제선택 속에서 어떠한 질서를 보게 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고 하면서

잠정적으로 3개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모델 A : 사회정책의 잔여 (殘餘) 복지적 모델

(The Residual Welfare Model of Social Welfare)

이 형식은 개인의 제요구는 그것을 통하여 충족되는 2개의 자연적 (혹은 사회적으로 주어진) 통로 즉 사설 (私設) 시장과 가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 2개의 통로로도 잘 안될 때만 사회복지제도 (또는 시설)이 역할하며 그것도 임시적인 뿐이다.²³⁾

모델 B : 사회정책의 산업성취수행 모델

(The Industrial Achievement-Performance Model of Social Policy)

이 정의는 경제의 종속물로서의 사회복지제도 (시설)의 의미심장한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요구는 공적과 업무수행과 생산성에 기초를 두고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자극, 노력과 보답, 그리고 제충과 집단충성의 형성과 관계있는 다양한 경제학적 심리학적 이론 (理論)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이것은 시녀 (侍女)

註 23) Titmuss, Ibid., pp.30-1

모델 (Handmaiden Model) 이라고 기술되어 오고 있다.²⁴⁾ 즉 산업적인 성취를 완수하기 위해서 종속적인 것으로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는 사고이다.

모델 C : 사회정책의 제도적 재분배적 모델

(The Institutional Redistributive Model of Social Policy)

이 모델은 사회복지를 사회에 있어서의 하나의 중요한 통합된 제도라고 보며 요구의 원리에 따라 어느 누구나 시장 밖에서 써 - 비스를 제공받는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회변화와 경제제도의 복합적 제결과에 관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사회평등의 원리에 관한 이론에 근거를 둔다.

위에서 우리는 사회정책의 객체가 시초에는 경제문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뿐이었지만 자본주의제도가 점차 발달하여 간에 따라서 심리문제, 윤리문제, 사회학적문제 및 정신문제 등등으로 그 객체가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시초의 문제는 빈곤문제였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온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회속의 문제는 중복적이고,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다. 그러므로 그 대응책도 통합적이어야만 할 것이다.

Ponsioen 은

「 사회정책의 문제는 2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그 첫째는 개인적 요구에서 크게는 사회의 요구에로 움직이는 충족의 선 (line) 의 차원이며 그 둘째는, 순수하게 생물학적 요구에서 정신적 요구에로 움직이는 충족의 차원이다. 이와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몇 개

註 24) Titmuss, Ibid.

의 접근방법이 있다」²⁶⁾라고 하면서 접근방법으로 3개를 들고 있는데 즉 (1) 윤리적 접근, (2) 종교적 접근 및 (3) 사회사업가의 접근이다. 필자는 지면에 제한이 있으므로 본 논문과 관계있는 (2)의 종교적 접근책을 들어 그의 소신을 파 보고자 한다.

IV. 基 督 教 的 解 釈

그는

「사회정책이론의 문제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접근책은 종교적 접근책이다」라고 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종교적 접근책의 가장 구체적인 예들은 교황 Leo XIII와 Pius XI의 회칙(回勅)(encyclicals)인 Rerum Novarum(R.N.)과 Quadrogesimo Anno(Q.A.)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고 말하고

「이 두 개의 회칙은 모두 다음과 같은 것을 전제로 하여 출발한다. 즉 인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과 현존 계급투쟁은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대항하는 것으로써 통한다」고 하고 있다.

그는 이어 「투쟁의 제원인을 분석하면 양 회칙은 개인주의와 결합한 물질주의(R.N.)와 또한 집단이해관계나 혹은 압력집단들이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의 한 구조(structure)와 결합하고 있는 물질주의(Q.A.)에 비상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그들의 의견에 의하면 주요 구체체는 하나님과 인류의 사랑안에서

註 26) Ponsioen, op.cit., p.25

나타나는. 참된 종교로 돌아오는 길일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이 인류의 사랑은 법률상의 제도를 통해서 사회속에 공고하게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정신적 발전과 서로 독립하고 있는 이해관계 집단에 기초를 두지 않고 만인의 공동선을 위한 협동집단위에 기초한 사회구조의 건립을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그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를 어느 누구에게나 수여하는 법률제도이다. 그 이유는 정신생활은 사회의 정신임으로 동료인간에 대한 종교적 태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27) 라고 단언한다.

그는 이어

「그러므로 종교는 윤리의 자연적 문화적 원리에 기본적 원리를 더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첫째로 종교는 인간은 가끔 부도덕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의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여 사회정책은 자발성의 흐름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악을 지향하는 이와같은 경향을 저지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비록 내적 저항에 반항하는 일이 있더라도 덕성을 촉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고

「두째로 종교는 형제애의 사상과 사랑이란 점에서 개인주의의 제한의 사상과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사상을 깨닫게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그러나 종교가 가르치는 공동선은 기본적으로는 물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심리적 복지와 문화적 복지와 꼭 같이 물질적 복지도 형제애나 공동선의 보다 높고 보다 정신적인 표현으로 인정받아야

註 27) Ponsioen, Ibid., p.26

만 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즉 이와같은 표준들의 하나하나는, 타인들 속에서 표현하는 것이며 또한 타인들의 달성으로 누구나 촉진되는 것이다.]²⁸⁾ 라고 하고 신약성서, 야고보서 제 2장에 있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의 주장을 요약한다면 사랑을 공유하여 그것을 상호 실천하는 즉 사랑이 압도하는 협동집단의 사회구조를 궁극적 이상으로 하고 그것을 영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랑의 원리를 실천 확산하여 전진하는 일이 기독교적인 사회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니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적 방향이며 사회화의 방향이다. 시대와 배경은 현대사회와 다르지만 초대교회의 집단생활에서 선례를 볼 수 있으며 이 예는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사회화 mission에 확고한 신념을 더욱 북돋아 주고 있다 하겠다. 그 예에 대한 성경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사도행전 2장 41~42절에는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 후에 새로운 신도가 된 사람은 삼천 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다.

사도행전 2장 44~45절에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고 한 말씀이 있다.

사도행전 4장 32~35절에는 「그 많은 신도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註 28) Ponsioen, Ibid., p.27

활을 증언하였고 신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저마다 쓸 만큼 나누어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고 있다.

Abe (阿部)는

서기 1세기의 중반(中半)을 전후한 「원시 예루살렘교단이 예수의 교훈의 실천으로서 긴밀한 공동생활을 영위한 사실은 유명하지만 위에 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는 기사(記事)는 그 구체적 생활의 묘사」라고 Troeltch의 말을 빌어 그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²⁹⁾같이 이것은 「사랑의 공산체」(religiöser Liebes-Kommunismus)이며 「생산공산체」는 아니다. 초대 신도들의 형제애가 공산생활로써 표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불 타서 높여진 것으로 경제제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종교의 생명에 충만하였던 집단이 신앙의 구체적 발로(發露)로 「물질의 공유」를 실현한 것으로써 신앙공동체의 출현이었다고 생각된다³⁰⁾고 하고 원시교회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건 현대의 그리스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믿는다. 즉「하나님의 영광대로 창조된 인간·하나님의 위격 다음에 위치하면서 자주, 자존, 자유의 인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 수 있으며 삼라만상의 지배를 위임받은 인간은 자기의 자유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여 신인(神人)관계를 파괴했으나 인간의 힘으로는 원상회복을 할 수 없었던 고로 인간을 그대로

註 29) Troeltch, Erunst, Soziallehren der Christlichen Kirchen und Gruppen W. W. I., 1919(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and Group), pp.62-63

30) 阿部志郎, “キリヤ教と社会福祉思想” 嶋田啓一郎編, 社会福祉の思想と理論, 京都, ミネウア書房, 1980, pp.87-7.

사랑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화신(化身)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여기서 인간은 원죄의 무서움과 그 원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절대적 사랑을 알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인간은 시간적으로 제한받는 짧은 생을 이 땅 위에서 사는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작업에 자유로 자기결정을 내려서 동참하여 그리스도를 모범하여 속죄의 길을 걸어 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복음을 믿고 실천한다」³¹⁾ 이와같은 기독교의 본질 확신과 그에 따르는 실천으로 Troelch가 말한 「사랑의 공산체」가 출현되었던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라 하겠으며 그러므로 앞으로도 언젠가는 「사랑의 지상천국」이 현재화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 하겠다.

V. 結 論

그러므로 우주는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와 경륜밑에 창조되었으며 그 창조의 뜻을 따라 인간은 그의 영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업에 순간적이거나 동참할 수 있는 역사적 방향을 인식하고

십자가를 통한 예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복음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여 이것을 사회화하는 과정에 동참하는 일을 「공동선」 「최고선」³²⁾으로 확신하는 고로 기독교의 본질속에서는 시초부터 그

註 31) 金德俊 論, “歐美社会事業哲學의 背景에 對한 試考,” 사회사업 학회지 창간호, 한국사회사업학회, 1979.6. p.94

32) 金德俊, Ibid.

목적 즉 역사적 방향과 목적인 동시에 수단인 사랑 즉 사회화적 방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기독교사회정책이란 개념을 가정한다면 위에서 말한 기독교의 역사적 방향과 사회화적 방향이 그 개념의 두 개의 기둥이 되겠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기독교의 본질적 사상이 사회개량주의의 따라서 사회정책의 근본적 사상적 기반이라고 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

(1981년 1월 15일 강남우거에서)

参 考 文 献

1. J.A.Ponsioen, (ed.), Social Welfare Policy, 'S-Gravenhage, Mouton Co., 1962.
2. 辺時敏, 社会政策・社会開発, 서울, 博英社, 1978.
3. 河野 稔, 社会政策の歴史的理論, 京都, 法律文化社, 1971.
4. 嶋田啓一郎編, 社会福祉の理想と理論, 京都, ミネルヴァ, 1980.
5. 平田富太郎, 佐口卓編, 社会政策講義, 東京, 青林書院, 1973.
6. 金徳俊, “社会問題의 概念的考察” 韓国社会福祉, 韓国社会福祉研究所, 1976.11
7. Robert M. Titmuss, Social Policy, London, George-Allen & Urwin Ltd., 1974.
8. Erunst Troeltch, Soziallehren der Christlichen Kirchen und Gruppen, W.W.1., 1919
9. 金徳俊, “欧美社会事業哲學의 背景에 对한 試考,” 社会事業学会誌, (참간호), 한국사회사업학회, 1979.6.